

## 키리졸브/독수리연습이 연례적 방어연습이라고?



## 북한점령 노리는 공격연습!

- ▶ 키리졸브/독수리연습은 북한정권 제거 등을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기반한 전쟁연습입니다.
- ▶ 북의 쿠데타, 대량살상무기 유출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미연합군을 북에 침투시키는 작전계획 5029에 따른 연습도 병행합니다.(이는 침략전쟁 부인한 국제법 위반)
- ▶ 격퇴 수준의 방어연습이 아니라 평양 점령 작전 등 공격훈련을 합니다.
- ▶ 2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최첨단 공격무기를 동원하여 60일 간이나 벌이는 세계 최대의 훈련입니다. (유럽에서는 4만 명 이상 참가하는 훈련은 상대방에 2년 전에 서면 통보해야)
- ▶ 특히 올해의 전쟁연습은 북의 핵실험과 유엔안보리 제재로 한반도 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높기 때문에 전쟁연습이 언제 실전으로 돌변할 지 알 수 없어서 매우 위험합니다.

## 북은 핵실험도 하는데, 우린 전쟁연습도 못하나?



### 핵실험도, 전쟁연습도 중단해야!

- ▶ 북은 핵실험하고 남은 전쟁연습하면 평화가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가까워집니다.
- ▶ 연평도 포격전은 남북이 대결로 치달을 때,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명백히 보여 주었습니다. 따라서 북도 핵실험 하지 말고 한미당국도 북에 대한 공격적 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.
- ▶ 한반도 전면전의 경우, 전쟁 발발 24시간 안에 수도권에서만 사상자 230만명이 발생합니다. (2004년 합참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)
- ▶ 한미당국과 북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체의 말과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.

Q  
&  
A

## 우리도 핵무기 개발하자?



## 핵무기가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아

- ▶ 핵무기는 평화가 아니라 공포와 궤멸적 파괴를 불러올 뿐입니다. 1945년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은 한 번에 30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.
- ▶ 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남도 핵무기를 가진다면 한반도는 핵무기 경쟁장이 되고, 일본의 핵무장도 막을 수 없습니다.
- ▶ 북에도, 남에도 핵무기는 없어야 하고,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핵 공격 위협도 제거해야 합니다.
- ▶ 군사적 제재는 불가능! 대화로 북핵문제 해결해야 합니다.

1990년대 중반 북폭론을 주장했던 페리 미국 전 국방장관,  
“북한이 이미 무기용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핵실험을  
한 2003년 이후 북폭론은 시효가 끝났다” (2009. 5. 30)

Q  
&  
A

## 핵무기도 없애고,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?



###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면 만사 OK!

- ▶ 올해는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.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'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'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. 때문에 지난 60년동안 한반도는 항상 전쟁위기를 겪어왔습니다.
- ▶ 한국전쟁에서 적군이었던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동족인 북과 서로 총칼을 겨눌 이유가 없습니다.
- ▶ 이명박 정부 5년간 제재와 대결이 반복되면서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. 따라서 한미당국과 북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. 즉,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, 북은 핵무기를 없애고, 한미동맹과 조중(북-중) 동맹을 함께 폐기하고, 남북은 군비를 축소해야 합니다.
- ▶ 정전 60년,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룹시다.

## 키리졸브/독수리 연습이 불법이라고?



### 유엔헌장, 헌법, 정전협정 위반!

- ▶ 키리졸브/독수리연습은 20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공격연습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유엔 헌장이 금지하는 '무력의 위협' (2조 4항)입니다.
- ▶ 북한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한 연습으로서 헌법 전문의 '평화 통일의 사명', 4조의 '평화적 통일정책 추진', 5조의 '침략적 전쟁의 부인'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.
- ▶ 해외에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들어오는 이 연습은 정전협정의 '적대행위 금지' (제2조 12항), '군사인원과 장비 반입금지' (제2조 13항 ㄷ, ㄹ) 규정 위반입니다.
- ▶ 이 연습은 평화적 통일,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을 규정한 7.4남북공동성명, 남북기본합의서, 6.15공동선언, 10.4선언 등 박정희 정권부터의 남북합의에도 위배됩니다.